



즉시 사용

담당

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실

과장 정재훈, 팀장 전정관
(044-200-2850, 2851)

국무총리비서실, 부산지역 시민사회 활동가 간담회 개최

□ 국무총리비서실(실장: 정운현)은 민정실 문은숙 시민사회비서관 주재로 11월 7일(수)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(부산시 중앙대로 소재)에서 부산광역시 시민사회 활동가와 함께 「시민사회의 발전 및 시민사회와 정부 간 협치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」를 가졌습니다.

*(참석)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, 관련 공무원 등 30여명

○ 이날 행사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지역간담회의 일환으로 지난 11월 1일 충청남도에서 간담회를 개최한 이후 두 번째로 마련됐습니다.

□ 이번 간담회에서는 부산지역 현안과 현장 활동의 여러 어려움을 듣고 시민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했습니다.

○ 먼저, 문은숙 시민사회비서관은 시민사회비서관실의 주요 업무와 시민사회 발전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민사회발전기본법 및 시민사회발전기본법 제정, 기부금품 제도 완화 등의 노력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.

- 아울러, 시민사회 및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 지원 방안과 시민사회 활동가 안정 제도 마련, 민관협력 소통창구 활성화, 민주 시민교육의 확대, 지역 시민사회의 고충 등 시민사회 측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
- 국무총리비서실은 시민사회 공통의 문제점을 시민사회와 정부가 힘을 모아 함께 해결해 나가자고 밝혔습니다.
- 앞으로도 국무총리비서실은 시민사회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현장 활동가의 소리를 가감없이 청취하고, 공익활동의 애로사항과 협치 필요사항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.

- ※ (붙임) 1.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지역순회 간담회 행사 개요
2. 간담회 참석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명단

- ▶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 및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방안 모색
- ▶ 지속가능한 민관협치 기반 조성과 민관 거버넌스 인식 확산 및 협치 체제 마련을 위한 방안 모색

□ 행사개요

- 일시 / 장소 : 2018. 11. 7.(수), 16:30 /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
- 주최 : 국무총리비서실, 부산광역시
- 주관 :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
- 참석자 :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, 관련 공무원 등 30여명
- 주요내용
 - 시민사회 및 민관협치 활성화 방안 의견 수렴 및 지원 방안 모색

[성명 가나다 順]

연번	성명	소속	직위	비고
1	김부련	맨발동무도서관	관장	
2	김호진	부산민족예술인총연합	사무처장	
3	김혜정	부산풀뿌리네트워크	대표	
4	민은주	부산환경운동연합	국장	
5	박진명	부산청년들	대표	
6	엄창환	심오한연구소	대표	
7	양미숙	부산참여연대	사무처장	
8	윤나영	부산YWCA	정책기획국장	
9	윤정선	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	국장	
10	이동일	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	사무처장	
11	이동환	부산사회적경제네트워크	본부장	
12	이수원	부산YMCA	과장	
13	최철원	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	기획실장	